

「특별 기고」

전용덕 교수의 자유를 향한 학문 여정: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조선왕조까지

박현철*

I. 서론

언뜻 생각 해 보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자유시장경제만큼 무작위적인 공포감을 주는 제도도 없다. 한국의 대중들은 온전한 자유시장경제를 경험한 바도 작동원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개심을 드러낸다. 물론 필자의 이런 견해는 주위사람들의 생각과 다양한 뉴스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므로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하성, 유시민 등과 같은 반(反) 자유시장경제주의자들의 대중적 명성, 즉 대중적 지지는 간접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강한 반(反) 자유시장경제 정서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구(舊) 소련의 몰락과 이에 따른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적인 개방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 유효성이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반면 과거 남미부국 아르헨티나의 몰락,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치로 내세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의 북유럽 여러 나라들의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과장 (hyun007@korail.com)

복지제도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는 정부에 의한 경제적인 통제와 간섭, 복지제도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에 따르면 이러한 간섭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주도권 쟁탈, 갈등,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비효율, 빈곤, 그리고 혼돈”¹²⁾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원리와 이점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타인의 성과물을 약탈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 반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이비지식인들의 선동 등으로 인해서 자유시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방해와 배척을 받고 있다. 여기 미제스(Ludwig von Mises),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라스바드같은 위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스승들의 뒤를 이어 사람들을 변명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한 지식인이 있다.

II. 학문 여정

1. 버리고 얻다

전용덕 교수는 1989년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The Determinants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결정요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류경제학의 일반적인 방법론인 수학적으로 정립된 경제학모형을 분석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실증

1) 머레이 N.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 p. 1166.

2) 간섭주의의 원인과 폐해는 *ibid.*, 제12장 시장에 대한 폭력적 간섭의 경제학 참조.

분석한 것이다. 이후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0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결정요인」, 1991년 「한국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92년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결정요인」 등 주류경제학의 틀 내에서 연구를 지속한다.

자유주의에 관심을 드러내는 최초의 흔적은 1992년 12월과 1993년에 각각 쓴 「시카고학파의 경제학과 한국경제를 위한 시사점」, 「공익사업 규제에 대한 시카고학파의 비판과 대안」이었다. 이 논문들은 1936년 케인즈가 정부간섭주의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토대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발간한 이래³⁾ 이를 추종하는 케인지언들에 맞서 이론과 실증분석으로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원배분과 경제발전에 유용함을 증명함으로써 현대경제학에서 강력한 맞수의 지위를 확립한 시카고학파의 이론과 모형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안하는 논문이다. 또한 1994년 9월에 발표한 「경쟁과 독점」에서 하이에크의 경쟁이론과 시카고학파의 법경제이론에 기반을 둔 템세츠(H. Demsetz)의 독점이론을 통해서 실현 불가능한 완전경쟁이론에 기반을 둔 신고전학파의 경쟁과 독점이론을 비판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경쟁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인 자유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시기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주로 시카고학파의 이론과 관점을 분석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라는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준비운동이나 평가전과 같은 기간으로 이해된다. 시카고학파가 최소정부와 반케인즈주의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들 학파를 대표하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정

3) 하이에크는 시류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잘 바꾸는 케인즈의 성향을 감안하여 이 책이 출간된 그 당시 체계적인 반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다. 존 레이볼드, 『하이에크 100주년 기념앨범』,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9, pp. 38-39 참조.

부나 중앙은행과 같은 인위적인 조직에 의해서 매년 일정 비율로 통화공급을 고정시키는 ‘K% 준칙’을 제안하여 정부의 통화독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법경제학에서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재산권이 양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오스트리아학파와 차이점을 보인다.⁴⁾ 그러므로 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8년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정책」이라는 논문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 논문은 미제스, 커즈너(Israel M Kirzner), 라스바드의 독점이론을 소개하고, 미제스와 커즈너의 독점이론은 라스바드에 의해서 논리적인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타당한 독점이론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국가가 부여한 특권”이라는 라스바드의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라스바드의 독점이론에 따라 대내적으로 정부의 각종 진입장벽과 대외적으로는 수출입 규제 등과 같은 독점의 원천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학에서 특히 한국경제학계에서 그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한 오스트리아학파의 독점과 경쟁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료하지만 강력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주류경제학을 배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 자유주의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앞으로의 활동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라스바드에 의한 패러다임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독점은 경제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보통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두 차지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알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학을 접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독점은 완전경쟁 혹은 경쟁적 시장일 때 보다 경제주체들에게 후생손실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그

4) Robert P. Murphy, “The Chicago School versus the Austrian School”, Mises Institute, 2011.6.20. 참조

러나 라스바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독점이 후생 손실을 가져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라스바드는 소비자나 소비자의 후생이 손실을 입는다고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요의 비탄력성은 순수히 소비자의 자발적인 수요의 결과이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도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거래에서 후생의 손실이 있을 수는 없다.”⁵⁾ 이러한 인간행동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라스바드의 사고방법은 방정식과 그래프로 구성된 경제모형을 통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고전학파를 배운 경제학자에게 생소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2. 여명의 자유주의 교육

필자가 1998년 만기제대하고 복학을 했지만, 근 3년간의 공백에 학교교정은 낯설었고 세상은 두 가지 점에서 소란스러웠다. 외환위기(IMF사태)와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Star Craft)’ 열풍이었다. 전자는 단순히 대외거래를 결재하고, 원화를 외국화폐와 교환하는 외환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기에 한국은 사회·문화·경제 등 전반에 걸쳐 거의 패닉상태였다. 연일 치솟는 금리와 폭락하는 주가, 파산하는 대기업과 은행 등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뉴스에 높은 경제성장과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있던 산업화세대와 그 후 세대들에게 외화가 부족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자금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 추가개방 등의 이행을 약속하고

5) 전용덕, 「오스트리아 학파의 독점관과 경쟁 정책」,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3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p. 132.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은 미증유(未曾有)의 사태였다.

집안의 소득이 IMF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경산시 외곽에 위치한 넓고 한적한 교정은 한국사회의 다다한 일과는 상관없이 느긋한 대학생들과 일상의 평안을 느끼게 하였다.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시경제학을 수강한다고 하니 다들 수강신청변경기간에 과목을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 교수님의 엄격한 이미지와 정확한 학점 부여에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주위의 친절함 배려에도 불구하고 평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에 수업을 계속 들었다. 교수님의 아우라(Aura)에 걸맞게 수강인원은 9명에서 12명 정도로 기억하지만 실제수강을 하는 학생은 매 시간 4~6명 정도였다.

수업은 시장경제에 관한 강의와 시카고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선택의 자유” 라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매시간 보고서를 써 오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수업과 매 시간 수업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어서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수업방식은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논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제출 받은 과제에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빨간색 펜으로 첨삭지도를 하여 되돌려주어 다음에 제출하는 과제에 스스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와 작문실력이 비약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방식과 교육서비스는 지금도 한국의 여타 대학에서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998년 2학기에 수강한 ‘경제사례연구’ 는 수업시간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도되는 경제관련 기사에서 정부나 전문가의 정책이나 주장

에서 시장경제기준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추리고 이를 논박하면 그 내용과 적정성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득점표를 받고 이를 합산하여 학점을 받는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수업내용과 방식이었다. 이런 교육방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반자유주의 교육내용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사고체계를 갖추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시장경제의 우수성과 정부간섭주의의 폐해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자유지상주의를 위한 독서토론회(RCL: Reading Club for Libertarianism)를 만들고 지도교수를 맡아 학생들이 미제스, 하이에크, 라스바드, 프리드먼의 주요 저작을 읽고 독서를 통해서 익힌 이론을 토대로 경제, 정치, 사상, 시사에 관한 자유토론을 뒷받침하고 교육함으로써 독서토론회 회원들이 심화된 자유주의지식을 습득하고 교내와 인터넷을 통한 자유주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3. 오스트리아학파의 독점과 경쟁이론

한국, 미국, 일본, 서유럽, 대만 등과 같은 입헌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된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들의 집회, 결사, 출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미국헌법이 국가의 폭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독재자 혹은 독재집단의 발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한 이래 권력분립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인류의 제도 중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⁶⁾ 문제는 독점화되면 무소불위(無所不

爲)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의 독점화 위협을 경제현상에 투영하여) 정확한 이론적, 실증적 기준도 없이 하나의 기업이 특정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태를 독점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폭력으로 이를 막고자 독점기업의 해체를 통한 기업 간의 견제와 균형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독점금지법(Anti-Trust Acts)이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이를 모방하여 1975년 12월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독점법이 선(先) 제정되고 이후 신고전학과 주류경제학에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론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특히 뒤늦게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은 신고전학파의 독점이론의 모호성에 걸맞게 그 적용기준과 범위가 모호하여 단속이 선행되면 기업이 입는 재무적, 이미지 손상은 소송을 통해서 뒤늦게 회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무조사와 더불어 정부가 기업을 통제·간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1999년 2월에 쓴 「규제의 이익집단이론과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이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법이라는 관점을 축⁸⁾으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공정거래법이 비록 1975년 제정되

6) 네이버 미국사 다이제스트100/견제와 균형 미국헌법의 정신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659&cid=43055&categoryId=43055&expCategoryId=43055>)

7)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John Sherman)은 스탠더드 오일을 겨냥해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체제로서의 독점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제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미국의 독점금지법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141&cid=43667&categoryId=43667>)

8) “법이나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제나 법이 공익(public-interest)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나 법이 사익(self-interest) 특히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자는 스티글러(Stigler)나 펠츠만(Peltzman)의 관점이고, 후자는 이철송이 부분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전용덕, 「규제의 이익집단 이론과 공정거래법」, 『사회과학연구』, 제6집4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 174-175 참조.)

었지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독점기업에 대한 통제와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법으로 강화된 것은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신군부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독립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⁹⁾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도서정가제가 실질적으로 공익에 부합하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간단한 모형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의의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공정거래법 제정 후 20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동기나 기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론적으로 그 간극을 메꾸고자 한 것이었다.¹⁰⁾ 또한 이 논문의 중요성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오늘날과 같은 강화된 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이는 미국의 독점금지법 제정 목적과 유사함을 보인다. 오스트리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독점이론은 정부의 규제와 법과 같은 진입장벽을 독점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카르텔을 보는 관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라스바드는 카르텔의 원리와 작용과정을 연역적으로 분석하여 카르텔이 단지 자유시장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업들의 ‘협력’ 일 뿐이며 이득이 되지 않는 기업은 원하면 언제나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카르텔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장치’ 라는 것이다. 반면 카르텔보다 덜 독점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합병(merger)은 실상 ‘영구적인 카르텔, 즉 영구적 결합과 융합’ 임을 증명한다.¹¹⁾ 이에 반해 신고전학파에서 카르텔은 소수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화를 추

9) Ibid., p. 175 참조.

10) Ibid., p. 174 참조.

11) 머레이 N.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 pp. 745-754 참조.

구하는 방법이며, 카르텔이 형성되면 개별 기업들은 독점과 똑같이 한계생산량 이하로 재화를 생산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은 비록 카르텔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계생산량 이하에서 서로 많이 생산하고자 할 것이므로 카르텔은 유지되기 쉽지 않지만 완전경쟁일 때보다 이익이 되므로 카르텔의 가격과 생산량은 완전경쟁과 독점상태 사이에서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한다.

현실에서는 정부의 진입장벽이 없으면 경쟁기업이 언제나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산업에 한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독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소수의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점이나 과점상태가 일반적이므로 이 상태에서 기업이 독점을 추구하는 방법인 카르텔의 작용원리와 경제적인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르텔, 합병, 협력, 담합, 독점의 차이에 관한 소고」에서 라스바드의 독점과 카르텔 이론을 토대로 카르텔과 담합, 협력, 합병의 개념과 차이점을 엄밀하게 정의(定意)하고 구분하여 신고전학파의 독점이론은 첫째,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삼고, 둘째,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의 협력행위를 무조건 담합으로 비난하고, 셋째, 자산의 획득, 보존, 처분의 자유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전학파 독점이론의 오류는 정부의 독점과 경쟁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어 실질적으로 ‘가치를 증식(value-enhancing)’ 시켜 사회적으로 유용한 효과를 내는 기업의 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결합과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¹²⁾

12) 전용덕, 「카르텔, 합병, 협력, 담합, 독점의 차이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7집3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참조.

다음으로 2004년 QJAE(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을 통해서 한국의 재벌과 같은 경제력 집중이라고 비난을 받는 복합기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미제스의 경제계산이론과 라스바드의 기업이론을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미제스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의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생산과정에 할당되는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어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경제계산 문제를 주장하였다. 라스바드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계산 문제가 사회주의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크기의 상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자본재에 대해, 기업들이 그 재화를 사고팔 수 있는 확실한 시장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경제법칙은 자유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상대적 규모가 일정한 최대한계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 법칙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단계들 혹은 생산물들의 완전한 수직적 통합을 위한 통합(merge)이나 카르텔을 할 수 없다.”¹³⁾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생산재 시장의 존재 여부이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와 똑같이 기업 역시 생산재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고 경제계산을 하지 못하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하는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무시하고 생산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계산의 불가능은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재의 단위당 효율성을 저하시켜 자원이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13) 머레이 N.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김이석 공역, 나남출판, 2006, p. 721.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는 분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자급자족이나 가내수공업 또는 영세기업에 의한 소규모 생산이 일반적인 형태이므로 생산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았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요소시장의 발달이 미비하거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에 투입되는 다양한 생산요소의 가격정보를 얻지 못하여 경제계산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외부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내부화를 통한 생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내부화가 많을수록 지주회사에 종속되는 기업의 수와 크기는 증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생산요소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복합기업(재벌)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기업은 외부생산요소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의 경제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써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복합기업의 형태는 각국의 특정한 제도적, 정치적, 기업관련 규제에 따라 사업부제형 단일기업과 다각형기업집단으로 결정될 것” 이라고 한다. 또한 외부요소시장이 발전할수록 경제계산 비용이 낮아지거나 없어져 복합기업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시장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복합기업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면 생산구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논문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코즈(R. Coase)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미제스의 경제계산을 적용하여 한국의 재벌과 같은 복합기업이 시장환경의 산물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4. 화폐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현대경제학에서 붐(boom)과 버스트(burst)로 순환되는 경기변동(bu

-siness cycle)의 원인과 해결책은 최대의 난제로 꼽힌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부의 통화시장에 대한 간섭으로 인지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Theory of Austrian Business Cycle 이하 ABC)은 “경제 내의 모든 산업 또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 기간 붐이 일어나고 잇달아 그런 산업이 위기와 침체로 이어”지고, “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화폐제도·금융제도와 간접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관련”¹⁴⁾되어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작금의 대부분의 국가는 금본위제나 자유은행제도가 아닌 중앙은행을 대리인으로 발권력을 독점하고 통화정책과 지급준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부분 지급준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화폐와 관련된 경제현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붐 이후의 경기침체는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종종 대공황으로 나타난다. 오스트리아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으로 중앙은행(정부)의 화폐시장 개입을 지적하지만 대응방법은 극단적으로 상이하다. 총화폐량과 화폐가격들이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는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¹⁵⁾을 기본원리로 하는 신통화주의 대표 프리드먼은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이 심화된 원인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에 의한 통화공급의 급격한 감소를 꼽는다.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¹⁶⁾에 의하면 화폐공급의 정의(定義)는 차이가 있지만, 라스바드는 1930년 말 대비 1933년 말의 화폐재고 감소율은 15.91%, 프리드먼은 1930년 말 대비 1933년 초의 총화폐공급량은 대략 3분의 1만큼 감소했다고 지적하여 대공황

14) 전용덕,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제도』, Keri, 2009, pp. 50-52 참조.

15) L.V.미제스, 『人間行爲의 經濟學』, 朴炳鎬 監譯, 經文社, 1987, p. 443 참조.

16) 전용덕, 「대공황과 통화주의자가 만들어낸 미신」, 『자유와 시장』, 제2권 1호,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2010.10, pp. 39-90.

시기에 연준에 의해서 통화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연준은 대공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지만 미국의 은행과 예금주, 외국인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이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은행이 연준에 진 빚을 상환했기 때문이다. 회원은행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연준에 대한 부채를 상환했다. 둘째, 금 재고가 감소했다. 미국인과 외국인이 현금의 금으로의 태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의 현금보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¹⁷⁾ 그 당시 달러는 지금과 같은 기축통화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위험이 점증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미국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게 되고,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지급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키고, 미국인들은 1933년부터 금을 소유할 수 없어서 은행파산 이전에 예금을 인출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현금수요가 높아져 연준이 증가시킨 달러공급이 시장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기축통화의 위치에 있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지만 기업과 개인들이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켜 늘어난 달러가 은행의 금고에만 머물러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연준에 의한 화폐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프리드먼과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 오류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표면적인 통계량이 아닌 이면에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행동과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의를 증명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공동저작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의 출판을

17) Ibid., p. 57.

통해서 여러 개의 ABC 중 라스바드 판을 표준으로 적용하여 미국의 1991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업별 및 자산유형별 투자 추이자료와 1954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기 미국의 국민소득계정의 실질민간고정투자지수와 실질민간소비지수, 10년 만기 재무성채권 고정이자율과 유효 연방기금 이자율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ABC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ABC의 핵심은 이자율과 시간선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서¹⁸⁾ 증가된 통화량 공급¹⁹⁾ 즉 신용창출은 시장이자율을 개인들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이자율(natural of interest)보다 낮게 만들어 붐과 버스트를 발생시킨다. 붐 시기는 생산재에는 과잉투자하고 소비재에는 과소투자를 하는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소비재의 과소비(overconsumption)가 나타나고, 버스트 시기는 많은 기업의 파산과 구조조정, 합병과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본원적 요소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고 이어 화폐수요의 증가와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촉발된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자산유형별 투자 추이를 역사적 경기변동 기간을 전후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사업에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 보는 미시적 접근과 “민간고정투자, 민간소비지출, 장단기 금리차이 사이의 장기 균형관

18) 100% 지급준비율이 아닌 현 은행제도 하에서 상업은행에 의한 신용창출이 발생하지만 라스바드는 중앙은행의 존재가 상업은행의 장기적인 신용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신용창출은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생하며 (루드비히 폰 미제스 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전용덕 역, 지만지, 2010, pp. 107-108 참조), 국제발행과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부의 압력, 중앙은행의 선출에 관여하는 행정부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신용창출도 많은 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19) 미제스와 오스트리아학파는 인플레이션의 본래 의미가 화폐공급의 증가라고 한다. 현재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의 의미인 물가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그 결과이고 이런 어의변혁은 경제정책의 혼란과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L.v. 미제스, 『人間行爲의 經濟學』, 朴炳鎬 監譯, 經文社, 1987, pp. 461-463 참조) 이 글에서 인플레이션은 경제학교과서의 의미를 사용한다.

계에서 벗어나는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 균형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세 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 하는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같이 투자회수기간이 긴 산업들과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경기호황기에 투자확대가 일어나고 뒤이어 청산되는 과정이 관측되므로 미시적 접근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투자와 소비가 균형수준을 벗어난 경우 균형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과 단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장단기금리 차이로 발생한 투자와 소비증가 효과는 10번째 분기를 전후하여 최대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 크게 둔화되므로 거시적 접근 역시 ABC의 유효성을 입증한다.²⁰⁾ 공저자가 밝히는 것처럼 ABC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에도 다수 있었지만²¹⁾, 이 저작은 ABC를 최초로 개간한 미제스나 이후 몇 가지 다른 내용으로 전개시킨 하이에크, 라스바드, 게리슨(Roger W. Garrison)도 언급하지 않았던 소비재관련 산업의 경기변동을 실증분석하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소비재산업 역시 과잉투자와 청산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향후 ABC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화폐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저작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사회』를 출판하여 조선시대의 화폐역사와 금융체계를 다루는 데까지 이른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인 선험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조선시대의 경제제도와 경제정책,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한 이 책의 제6장 상평통보의 발행과 그 영향에서 조선중기 1678년 숙종 4년부터 법화로 사용되었던 ‘상평통보’의 실질적인 발행목적과 효과, 부작용을 보여준다. 멩거(Menger, Carl)가

20) 전용덕·김학수,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Keri, 2009, pp. 108-109 참조.

21) Ibid., p. 40.

주장한 화폐의 자연발생설을 증명하듯 그 당시 조선에는 면포, 쌀, 은 화 등이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어²²⁾ 화폐시장에 정부개입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상평통보를 유통시키는데 조선경제사 연구자들은 그 목적을 주로 상업거래의 편리성을 위한 “공익”과 시노리지 획득을 위한 “머니타이제이션(monetization)” 수단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²³⁾ 서구의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금과 같은 상품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왕과 제후의 역할은 이들 금속화폐의 무게와 부피를 인증해 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정부는 화폐의 이름과 명목가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값싼 동전으로 대체하거나 금속화폐에 다른 물질을 섞어 넣거나 동전의 무게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위변조를 시행하고 중국에는 정부가 화폐주조를 독점하거나 ‘법화 제정법(legal tender laws)’을 통해서 화폐시장의 완전한 정부독점을 완성하게 된다. 정부가 화폐주조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은 화폐주조비용을 화폐가치보다 낮게 유지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체계가 붕괴하기 전까지 대중의 재산을 직접 징발하거나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이들의 자원을 손쉽게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상평통보는 명목상 상품화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리의 함량이 적은 ‘부분지급준비 주화’ (fractional reserve coin)로 시장에 처음으로 유통되었다.²⁵⁾ 상평통보가 100% 구리함량을 가진 완전한 상품화폐로 출발했다면 민간에서 수용하기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에서 철과 구리가 생산되지 않았던 까닭에 이들 금속 역시 가치

22) 전용덕,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사회』, 태학사, 2017, p. 148 참조.

23) Ibid., pp. 126-127 참조.

24) L.v. 미게스, 『人間行爲의 經濟學』, 朴炳鏞 監譯, 經文社, 1987, pp.849-854 및 머리 로스바드,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전용덕 역, 지만지, 2010, pp. 97-106 참조.

25) 전용덕,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사회』, 태학사, 2017, p. 135 참조.

가 높아서 완전한 상품화폐로 상평통보를 만들었다면 화폐제조 비용이 시노리지를 초과했을 것이다. 숙종 이전의 법화 발급을 무산시켰던 원인 중의 하나로 철과 구리의 부족이 있었다.²⁶⁾ 그러나 그 당시 구리는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낮은 금속이었기에 상평통보의 유통은 일부 인구밀도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런 낮은 시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상평통보 발행초기부터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법화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금속물질의 부족으로 조선왕조의 법화발행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법화로 선택한 금속의 낮은 시장성이 숙종 이전의 법화발급과 유통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한다.²⁷⁾

조선왕조는 최초 발행부터 다른 법화인 당백전을 발행한 1866년까지 180년 동안 상평통보 자체의 무게와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발행량을 늘이는 방법 등을 통해서 가치변조를 시도하였다. 때때로 가치변조는 구리가격의 변동을 동전제조에 반영하거나 경제성장에 따른 화폐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평통보 발행 바로 다음 해인 1679년부터 지속적으로 화폐주전수익률이 기록되고 상평통보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전 제조를 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상품화폐 기능을 하고 있었던 면포, 쌀, 은화와 상평통보의 교환비율을 고정시켜 상평통보의 명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등 법화를 제조하고 유지하면 이익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조선말에 왕조의 재정충당을 위해서 당백전(當百錢), 당오전(當五錢), 백동화(白銅貨) 등을 발행하여 그나마 상대적 양화에 있던 상평통보를 다른 법화로 대체하고자 꾸준히 시도했던 사실을 볼 때 조선왕조의 상평통보 발행목적은 시노리지 획득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⁸⁾

26) Ibid., p. 133 참조.

27) Ibid., pp. 148-150 참조.

그러므로 조선시대 최초의 법화인 상평통보의 발행목적은 “머니타이제이션(monetization)”이며 조선정부가 법화의 지위를 구축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과 시노리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의 화폐역사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조선시대 화폐 연구는 화폐의 기원과 기능, 법화제정의 실질적인 목적 등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립한 오스트리아학파의 화폐이론을 적용하지 않았기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III. 이론의 힘²⁹⁾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경구이다. 종교 서적에 나오는 이 문장의 종교적 의미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문장 그대로 ‘진리’ 즉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참지식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봉우리가 진리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세 개의 봉우리가 탐색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와 사용을 공동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부가 규제하고 개입하는 간섭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자본주의이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자본주의는 간섭주의에 점철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규제, 중소기업에게는 지원, 부자에게는 증세, 빈자에게는 복지를 제공하는 정부의 간섭주의 정책은 대중과 언론에게 가시적이고 때때로 통쾌하게 만들기에 그들의 지지를 쉽게 받는다. 그러나 규제와 지원은 실업과 신규고용 감소³⁰⁾,

28) Ibid., pp.186-187 및 pp. 214-250 참조.

29) ‘하이에크 100주년 기념앨범 10장 사상의 힘’에서 착안(존 레이볼드, 『하이에크 100주년 기념앨범』,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9)

30)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증세와 복지는 자본재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정부간섭의 부작용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프랑스의 위대한 자유주의자 바스티아가 160년 전에 드러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개념은 경제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규정했다고 생각한다.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행동이든, 제도이든 법이든 간에 한 가지 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일련의 연속된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눈에 잘 띈다. 반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들도 많은데, 그런 효과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무척 다행이다.”³¹⁾

경제현상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고 인간시야의 가시권에 벗어난 빛의 굴절과 세균의 움직임은 적외선 망원경, 현미경 등과 같은 광학기기를 사용해서 관찰하는 물리학과 생물학과는 달리 경제학은 그러한 특정 도구를 이용해서 연구대상을 발견하거나 들여다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가 참지식을 얻도록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엄밀하고 정확한 경제이론이다. 오스트리아학과 경제이론의 핵심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이고 이것이 인류를 가장 큰 번영의 길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원인이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독점, 경쟁, 경기순환 및 화폐, 방법론 등의 이론은 일괄적으로 이를 증명한다. 이 글은 교

으로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규제로 감소하는 대기업 일자리의 일부를 상쇄하거나 전혀 하지 못한다.

31) 바스티아, 『법』, 김정호 역, 자유기업센터, 2014, p. 17.

직생활 전반에 걸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과 방법론을 연구, 보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만든 한 경제학자의 연구성과와 한국경제학에 대한 공헌을 짧게나마 정리할 목적으로 쓴 것이다.

전용덕 교수는 수많은 논문, 저작, 칼럼, 강의 등을 통해서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증명하였고, 특히 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문제의 쟁점을 시의절적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직한 대학교와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하이테크 아카데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전국주요 대학에 개설된 ‘시장경제의 이해’라는 강좌의 강의를 통해서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론과 방법론 등을 교육하고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점점 복지와 평등, 정부간섭의 만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가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오스트리아학파의 지적 전통을 이어가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공헌은 부족하나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4번 수상함으로써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에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뿌리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발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부족한 지적 능력과 배경지식이 이 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잖이 방해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고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제시한 『경제학과 역사학』을 다루지 못했고, 본문에서 논의한 논문과 저작의 연구 성과를 심층적으로 논증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통계기록 등의 실증적이고 명분적인 기록을 해석·분석하는데 그친 기존 조선경제사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이론과 정의이론을 적용하여 조선왕조시대의 경제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준 대작 『신분

제와 자본주의 이전사회』를 주제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에 비해 편린으로 논의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러한 필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진리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자유주의라는 종착점에 이른 교수님의 노고와 연구 성과를 드러내는데 조금이나마 공헌하기를 바란다.